이재명, 김동연과 민생 행보…친명-비명 '단일대오' 부각

수원 전통시장 찾아 소상공인과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등 논의 민생 경제 이슈 고리로 '원팀 대응' 부각…당내 분열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단일대오' 부각에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도 수원의 전통시장인 못골 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재명표' 대표 민생 경제 정책 중 하나

이 대표는 지난 20일엔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가 연일 촘촘한 민생 경제 일정을 소화하는 것엔 '먹사니즘'으로 명명한 민생·실용 노선을 통한 중도 확장 행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당내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방문에는 비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못골시장을 함께 돌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인 만큼 이날 시장 방문 계획을 김 지사 측에 알리며 합류가 가능한지를 타진했고, 김 지사 측이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고 양측 관계 자들이 전했다.

여기엔 민생 경제 이슈를 고리로 '원팀 대응'을 부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열 우 려를 불식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 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며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 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 이후 "이 대표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新) 3김'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이 대표와의 대립각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 같은 '원팀'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의문 부호를 붙이는 시각도 있다.

당장은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 대표의 선고에 대응해 한목소리로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물밑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언제든 당내권력 지형 재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표, 선거법 징역형 항소

검찰도 항소 예상… '김문기 골프' 등 허위 사실·고의 쟁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 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 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 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 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 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 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 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 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 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 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 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 우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 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 연합뉴<u>/</u>

한동훈 이름 '尹부부 비방글' 점입가경

친윤 "당무감사 필요" 친한 "수사하는게 답"…한동훈 "대응 않겠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 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 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 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것이 있 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 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의혹의)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 감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

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며 "한 대표가 복잡한 조사나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홍준표 "이재명 '법카' 기소는 망신주기"

SNS에 메시지…"입증 어려워"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 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것과 관 련,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시 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 하지 않지만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